

'야당 심판' vs '기회 달라'...지지 호소 총력전

이준석 “거대 野 무리한 발목잡기 뚫고 일하게 해달라” 박지현 586용퇴 등 쇠신론 내놔지만 윤호중 일축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심판론’과 ‘반성·쇄신론’이라는 엇갈린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에서 파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난 집권기는 물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오만과 독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이란 도식을 내세워 검수완박을 강행했지만 여론이 호전적이지 않은 데다 기대했던 이재명 효과마저 퇴색하자 ‘읍소’ 전략을 재차 꺼내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오만한 ‘20년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며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인천 계양을에서 대권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식에 가득찬 망동과 계약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에게 규탄받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

지 않고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사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민주당을 편협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겠다. 저 박지현이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돼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 용퇴론’ 등 대선 패배 책임과 관련,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오늘, 내일 중에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호중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쇠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된 것 없다”, “(호소문 발표 등) 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중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인 차원의 입장발표로 알고 있다”고 선을 긋는 등 박 위원장의 쇠신은 하루도 못돼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섬진흥원 ‘제1회 한국섬포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설정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섬진흥원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한국섬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국회,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한국섬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KID TV) 생중계도 이뤄진다.

‘제1회 한국섬포럼’은 섬과 바다, 농어촌을 연구하는 3개 국책연구기관이 손잡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포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다.

기조강연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섬종합발전계획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방안’,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의 ‘섬어촌 지역소멸 위기 실태와 선제적 대응전략’, 신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의 ‘농산어촌 지역균형발전 실천 사례와 섬 지역 발전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이어 강봉룡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이용규 한국도서(심)학회 회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이영성 서울대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 신순호 목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첫발을 내딛는 ‘한국섬포럼’이 섬의 대항해시대를 여는 등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계광장 유세 나선 송영길 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 정책 유세를 하고 있다.

‘갓길·인도 위 무법자’ 선거 유세 차량...시민 불편

선거 차량, 우회전 차선 모퉁이 주차...출퇴근 차량 정체

‘○○○후보 째이야~ 완전 째이야...’ ‘뽕뽕’

인도와 도로 갓길에 선거 유세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같은 날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도 유세 차량이 정차했다.

선거 운동원들은 차량 양옆과 맞은편 도로 갓길로 나와 대형 홍보 팻말을 든 채 울동을 이어갔다.

운전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자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인도와 횡단보도 위 선거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퇴근길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인도 위에서 유세 차량이 정차한 채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한 선거 노래만 끊이지 흘러나왔다.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안전봉을 들고 주변에서 차량 안내를 하긴 했지만, 정체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도 유세 차량이 정차했다.

선거 운동원들은 차량 양옆과 맞은편 도로 갓길로 나와 대형 홍보 팻말을 든 채 울동을 이어갔다.

운전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자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인도와 횡단보도 위 선거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퇴근길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인도 위에서 유세 차량이 정차한 채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차량 유세 차량에선 트로트를 개사

유세 차량이 폭이 1m 남짓한 인도 위를 차지하자, 보행자들은 몸을 웅크린 채 인도를 지나가거나 차도로 걸어야 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남구 민원 게시판엔 인도 위 유세 차량 관련 보행 방해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인은 ‘광주 남구 백운동 초등학교 인근 인도 위에서 선거 유세 차량이 홍보 중이다. 학생들 등굣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운전자 김모(52)씨는 “일반 시민은 황색 선 갓길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묻는다”며 “아무리 선거 홍보라고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도 하지 않은 데다 시위 차량에 따른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부 남모(32)씨는 “선거기간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 시위 금지 구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선거기간 유세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를 묻는다”며 “아무리 선거 홍보라고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도 하지 않은 데다 시위 차량에 따른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부 남모(32)씨는 “선거기간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 시위 금지 구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선거기간 유세 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를 묻는다”며 “아무리 선거 홍보라고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도 하지 않은 데다 시위 차량에 따른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항쟁 주역은 뒷전’...5·18기념식 초청장 능장 발송 도마

보훈처, 기념식 참석 규모 확대에 안일 행정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행사 준비가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초청장을 제때 받지 못한 일부 5·18 유공자·유족 상당수가 기념식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가보훈처와 5·18유공자 단체에 따르면, 일부 5·18유공자·유족들은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보훈처는 기념식 당해 전인 13일 모든 5·18 유공자·유족 4430명에게 초청장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상당수 유공자는 기념식이 끝난 19일 이후에야 초청장을 받았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인 만큼, 사전 발송한 초청장을 건네받지 못한 유공자, 유족들은 현장에서 초청

명단 확인·신분증 대조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입장할 수 있었다.

때문에 기념식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1300여 명 규모(경찰 추산)로 진행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 주요 5·18유공자단체장과 각계각층 인사로 앞 좌석은 가득 찼으나, 뒷좌석은 비거나 경호인력 등이 대신 자리를 채웠다.

기념식장에서 상영된 5·18 항쟁 경과 설명 영상에 등장했던 한 유공자도 20일에서야 초청장을 받아 기

념식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5·18유공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유공자는 “예년에는 5·18항쟁 기념일 일주일 전이면 초청장이 집으로 왔지만 올해는 기념식 끝나고 이를 뒤에야 도착했다”며 “유공자를 우대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올며 겨자 먹기’로 보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웃기는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임종수 5·18공로자회장은 “초대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항의 전화가 5건 가량 있었다. 기념식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는데 초대장 발송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보훈처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6·1 지방선거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24일 사후보가 24일 발표한.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반려동물 체험학습장과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산책, 식음, 숙박, 치유, 장모할 수 있는 특화시설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전남에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 등을 위한 동물복지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전남 관광 문화산업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전남에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 등을 위한 동물복지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전남 관광 문화산업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장석웅 교육감 후보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후보가 맞춤형 교육복지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전남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20만 원 지원을 공약했다.



며, 모든 학생이 재능과 끼를 살려 미래 희망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은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서 고교수업교육을 완성했다. 초·중·고교 학생 학습준비도를 지원했으며,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지원도 늘려 나갔다”며 “학생 등하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를 도입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교육가족들을 위해 교육회복특별지원금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24일 오후 전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를 넘어 전국 최고의 맞춤형 복지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후보는 “전남교육은 지난 4년 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펼쳐 왔다”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각자 고르게 누리

장 후보는 “소외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복지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맞춤형 교육복지 5대 핵심과제 실천을 공약했다.

김대중 교육감 후보 “공부하는 학교 만들겠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후보는 24일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전남의 교육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를 활용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특히 먼 단위 학교에 우선 배치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를 연계한 활동을 확대하고, 대입 지원관·진로컨설턴트 채용을 늘려 진학률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배려와 소통, 리더십을 키우는 더불어 사는 미래형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학습권과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좀더 확실히 구축하는 동시에 예방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배 기자

김 후보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과 교권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할 것”이라고 교육력 향상 계획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과 교권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할 것”이라고 교육력 향상 계획을 제시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6·1지방선거 투표마감 시각인 6월 1일 오후 7시30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25일까지) 종료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김도기 기자

호매민평

이태헌

어째야쓰까잉?

61지선 내가1 민주당, 61지선 내가1 무소속, 61지선 내가1 무당파, 61지선 내가1 무소속, 61지선 내가1 무소속, 61지선 내가1 무소속

어찌든 사람보고- 그러개

어째야쓰까? 누구를?

태헌